

시선

사설

변화도 좋지만  
차근차근 소통부터

새 학기를 기준으로 대학본부 행정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를 통합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비효율적이었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개편의 주요 목표다. 미래정책원과 재정예산처는 ‘기획조정처’로, 지구사회봉사단과 인문사회재건연구원의 행정 업무는 미래문명원으로 통합된다. 체육대학과 체육대학원 등 대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학 일부는 행정실을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몇 년 간 행정 거버넌스 개편은 우리대학에서 수차례 의제로 다뤄졌다. 2013년 연말 조인원 전 총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과 예산, 캠퍼스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4년 ‘행정·재정 발전 계획안’을 통해 정책 부서, 유사 부서 통합을 골자로 하는 행정 개선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를 통한 행·재정 거버넌스 개편이 추진됐다.

이번 개편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편의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기획조정처는 과거 존재했던 기획조정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개편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편을 주도한 부서와 노동조합이 개편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펴고 있는 탓이다.

미래정책원 전략기획팀은 구조를 먼저 정하고 업무 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은 업무 재분배와 인력 배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꼬집는다. 서로 개편 과정의 우선순위가 상이한 가운데, 개편 자체는 실행된 형국이다. 이러다보니 개편의 대상이 된 한 부서는 개편 직전인 2월 말까지도 자신들 역시 인사발령과 실질적인 후속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개편의 목표나 결과 자체에까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타 대학에 비해 비대한 행정조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구조와 지체되는 의사결정 과정 등 행정 개편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점은 산더미다. 발전, 혹은 생존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무리가 없다. 대학 내외를 둘러싼 환경이 적대적인 만큼 변화에 속도를 낼 필요성은 분명하다.

역시나 문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과, 잡음이 결과에 끼칠 영향이다. 변화의 과정은 세밀하고 치밀해야 한다. 변화 도중에 방향성이나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공감에서 우리나라는 동참이 필요하다. 한데 지금의 형국은 첫 단추부터 잡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까지 얹혀들며 사태가 복잡해지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되는 사무실의 명패는 바뀌 달면 그만이지만 이를 구성할 사람 하나하나가 그리 쉽게 바뀔 수 없다. 여기에 몇 년간 지속된 변화와 혁신의 주장으로 인해 피로도가 가중된 만큼, 공감마저 얻지 못한다면 변화가 동력을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타개책은 명확하다. 마주하고 치열하게 소통할 것, 그리하여 공감으로 ‘함께’ 변화를 일구어 나갈 것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대학은 지금

새학기 시작해도 여전히  
잔존하는 대학가 문제들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고려대의 SW기초교육인 ‘정보적사고’ 강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변화와 개선 시급한 SW 기초교육 ‘정보적사고’/고대신문, 2019.1.29.**) 일부 수강생이 인터넷 검색을 하며 온라인 시험에 응시하는 등 강좌 내용을 적극적으로 학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SW중심대학 사업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택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연세대 총여학생회(총여)는 ‘학생총투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총여학생회, 총투표 결과 규탄 기자회견 열어/연세춘추, 2019.1.25.**) 총여는 기자회견에서 ‘총여학생회폐지위원회’가 총여 재개편 TF 활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 성폭력담당위원회가 총여의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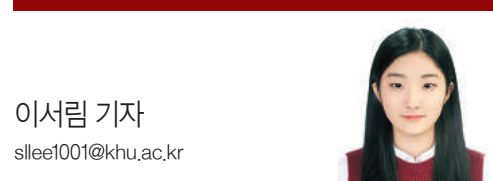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이 주의 주제 - 융합전공

‘100점짜리’ 제도, 충분한 숙고에서 나온다



취재원으로부터의 답변이 부정확한 유형은 다양하다. 일부는 기사를 피해버리거나 연락을 받지 않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안을 알면서도 대강 얼버무리며 넘어가기도 한다. 모든 경우가 어렵지만, 난감한 경우는 사실 따로 있다.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무 것도 없을 때’다. 융합전공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달,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답변은 이런 것 같다”는 교내 업무 담당자들의 말이 메아리처럼 기억에 남는 이유다.

융합전공은 지난 2017년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인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서 출발한 새 교육 트렌드다. 정부부처가 전공 개설의 허들을 낮추자, 대학가는 발 빠른 속도로 각종 융·복합 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우리 학교 역시 17개 전공이 참여한 6개 신규 융합전공 도입 계획을 밝히며 논의과정에 돌입한 바 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학교가 내놓은 결과물은 다소 성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 이 반학기부터 시작되는 융합전공제도에는 9개 전공이 참여한 4개의 신규 전공만이 남았다. 최초 검토 학과에서 약 절반 정도에 달하는 전공 참여 의사가 불투명하거나 철회된 셈이다. 융합전공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인 ‘제1전공으로의 이수’가

가능한 전공도 현재로서는 글로벌 문화기술 전공 하나뿐이다.

앞서 준비의 미흡을 알리는 신호는 계속 감지돼 왔다. 융합전공은 그 특성상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육과정 수립뿐 아니라, 교수진 간의 합의점 도출·학사제도 개선·행정인력 확보·학생 유인책 등 선행돼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충분한 행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융합전공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학칙 개정안은 수차례 부결 과정을 겪었고, 마지막 실행과정마저 별다른 홍보 없이 수강신청 바로 2주 전 발표했다. 숨 가쁘게 진행된 과정 속에서, 정작 이를 알아야 할 학생들은 끝까지 소외됐다.

이전에도 우리학교는 ‘융합’ 지향의 교육 도입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과 수업을 선택해 듣는 연계전공이 그러했다. 연계전공 또한 ‘대세’를 따라 개설됐다가 관리주체의 부재, 화합적 융합의 부재 등 사전 준비의 미비로 결국 사실상의 폐지 수순을 밟아야 했다. 교육에 있어 융행만을 쫓지 않고, 앞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구성원들의 상황에 맞게 정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외부의 이슈보다는 내부를 철저히 살펴 새로운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된다. 조금은 더 고민해도 된다. 어디에서나 그렇듯, 좋은 제도는 철저한 준비와 숙고 끝에 완성되는 법이다.

속기구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후 총여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총학)와 별개의 자치 단체로서의 총여, 총학 내에서 존속하는 총여 등 존속 방식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대학노조가 서울대 비정규직 자체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학노조, 본부 향해 “비정규직 자체직원 정규직 전환 촉구” 외쳐/대학신문, 2019.1.28.**) 대학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 사회적 책무 성실 이행, 차별적 인사시스템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또 “서울대 비정규직 자체직원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지만, 아직도 정규직 전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본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대 대학원생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가 약 1.9%씩 인상됐다.(**올해도 대학원·정원의 외국인 등 록금 인상됐다/중대신문, 2019.2.18.**) 대학본부는 대학원 수업료 인상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며 “내년에는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료 인상 사실은 따로 공지

되지 않은 채 고지서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총학은 ‘개설과목 수 급감 사태 해결 및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학생들 교육권과 강사를 노동권 보장하라”/교수신문, 2019.2.25.**) 고려대 총학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본부에 2019년 1학기 개설과목 수 작년 수준으로 회복,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 없이 강사법 취지 준수, 2019년 2학기 강의 개설과 강사법 실현 논의를 위한 학사제도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고려대 측은 본부 차원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학사 관련 지침을 내린 적은 없으며, 총학의 주장만큼 강의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부산대에서 학생총회가 개최됐다.(**“대학본부 학생 의견 반영해야”, 7년 만에 학생총회 개최/부대신문, 2018.12.14.**) 학생들은 “대학본부가 학사제도 개선안과 새 단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총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참석 학생 대다수가 비민주적인 학칙 개정 반대, 학생 의견 수렴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학습권 정책 마련 촉구, 총장 선거 실질적 투표권 보장에 찬성했다.

매년 찾아오는 봄  
그 새로움을 위해

세시봉

이후승 (편집장)



매서운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란 예측이 무색하게 무난히 겨울이 지났다. 그리고 봄이 다시 우리 곁에 왔다. 봄은 설렘을 가득 담고 있는 계절이다. 겨울을 이겨낸 뒤 찾아오는 따뜻함, 곳곳에 만개하는 꽃처럼 많은 수식이 없지만 봄이 가장 설레는 까닭은 바로 ‘다시 찾아오는 새로움’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8년 여러 부분에서 결실을 맺었다. 3년 만에 후마니타스칼리지가 큰 규모의 개편을 이뤄냈고, 400명의 기능직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데 합의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이뤄낸 가장 큰 결실은 법인과 구성원 대표가 합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의 도입이었다. 이 결실을 통해 경희대에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는 설렘은 구성원들에게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연일 풀려가는 날씨와 달리 우리학교의 봄은 다시 찾아오는 새로움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흐드러진 목련과 만개한 벚꽃이 황홀함을 선사하고, 본관과 사색의 광장에서 봄을 한껏 즐길 생각에 설레는 이 봄날에 총장 선출제는 아직도 딱딱한 껍질 속에서 주위를 견디는 겨울눈에 머물러 있다.

조인원 전 총장이 4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적 총장 선출에 합의한지도 벌써 세 달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총장이 정식으로 선출될지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로드맵이란 규정은 물론이고 정확한 선거일시까지 포함된다. 겨울동안 구성원 대표단은 법인에 꾸준히 총장 선출 규정을 요구했지만 법인은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만 했을 뿐이다. 공개된 것은 규정이 아닌 이를 요구하는 구성원 대표단의 성명서뿐이었다.

물론 3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의 상황이 그리 나빠 보이지만은 않는다. 법인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총장 선출 관련 법안 초안을 총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으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총장실은 이를 어떻게 공개할지 논의 중이며 회의 종료 후 즉시 구성원에게 공개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총장 선출제와 관련한 구성원의 신뢰는 이미 많이 떨어져있다. 총장 선출제를 논의하던 당시 법인이 여러 차례 논의에 임하는 태도를 바꾼 까닭이다. 총장 선출 권한이 법인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9월에는 법인이 아닌 대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르면 지난 9월에 발표됐어야 할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총장 대행체제만은 피하겠다는 말도 허사로 돌아갔다.

법인과 구성원 대표단 모두 이번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열릴 5월 전에는 총장 선출을 완료해야만 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출제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에 이르렀던 지난해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미 늦은지도 모르겠다. 학내 결재 사안에 대한 총장 직무대행의 서명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부끄럽다. 늦어진 이유가 보다 나은 규정을 위한 수차례 회의와 꼼꼼한 이사회였다면 하루빨리 법안을 공개해 새로운 봄을 기다렸던 구성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이후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책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news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